



박효근의
최강 법무사 민사소송법
(2024년 시험 대비)

2023년 법무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자료

Case 관할합의의 모습 및 효력,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¹⁾

[기본적 사실관계]

丙은 2022. 1. 1. 丁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계약서상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십시오(아래 각 문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丙은 2023. 1. 10. 자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丁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송을 신청하였다.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십시오. (10점)
2. 만약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였고(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 戊가 丁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경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를 논하십시오. (10점)

1) 2023년 법무사시험 기출(20점).

I. 설문 1.에 대하여

1. 결 론

관할위반이라는 丁의 주장은 타당하다.

2. 이 유(관할합의의 모습 및 효력)¹⁾

-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 ② 관할의 합의에는, 법정관할 외에 1개 또는 수개의 법원을 덧붙이는 부가적 합의(경합적 합의)와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배타적 합의)의 두 가지가 있다. 명시적으로 전속적 또는 부가적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합의된 바에 따를 것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관할법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전속적 합의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보아야 한다.
- ③ 判例도, 금전차용증서에 ‘만일 본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부동산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법정관할이 있음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같은 지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자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법정관할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위와 같은 여러 법정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한다.
- ④ 관할합의가 성립되면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특히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 ⑤ 사안의 경우, ㉠ 丙은 丁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계약서상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피고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29조의 관할합의의 요건도 충족한다. ㉡ 따라서 다른 법정 관할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하므로, 丙이 자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丁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므로 丙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라는 丁의 주장은 타당하다.

1) 대판 2020. 12. 10. 2020다255085.

II. 설문 2.에 대하여

1. 결 론

위 1문항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관할위반이라는 丁의 주장은 역시 타당하다.

2. 이 유(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 ①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¹⁾
- ② 다만, 判例는,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²⁾
- ③ 사안의 경우, ㉠ 丙은 丁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계약서상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피고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29조의 관할합의의 요건도 충족한다. ㉡ 따라서 그 후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면, 지명채권의 양수인인 戊에게도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戊가 丁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므로 戊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라는 丁의 주장은 타당하다.

1) 대결 2006. 3. 2, 2005마902.

2) 대결 1994. 5. 26, 94마536.

Case **일부청구 종합사례**(명시적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해당 여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의 방법,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¹⁾

[기본적 사실관계]

2019. 4. 1. 甲은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20. 4. 1.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아래 각 사안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로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의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1) 2023년 법무사시험 기출(50점).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4.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인데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5.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서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의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甲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I. 설문 1.에 대하여

1. 결 론

甲의 2021. 4. 1. 소제기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2. 이 유(명시적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해당 여부)

- ①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당사자가 동일하고, ㉡ 소송물이 동일하며, ㉢ 전소의 계속 중 후소가 제기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¹⁾
- ③ 사안의 경우, ㉠ 2020. 4. 1.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 계속 중인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는 동일하고, 전소 계속 중 후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다. ㉡ 다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가 문제되는데, 甲은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는 후소와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甲의 2021. 4. 1. 소제기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II. 설문 2.에 대하여

1. 결 론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유(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²⁾

1) 대판 1985. 4. 9, 84다552.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민법 제766조 제1항), 재판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는 소장을 제출한 때에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제248조).
- ②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③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④ 사안의 경우, ㉠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인 2019. 4. 1.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응 2022. 4. 1.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한편, 甲은 2020 4.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5. 1.에야 1천300만 원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甲은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4. 1.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실제로 위 소송 계속 중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2020. 4. 1.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금액 700만 원뿐만 아니라 확장한 청구금액 1천300만 원을 합한 총 청구금액 2천만 원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Ⅲ. 설문 3.에 대하여

1. 결 론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유(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¹⁾

2) 대판 1992. 4. 10, 91다43695.

1) 대판 2020. 2. 6, 2019다223723.

- ①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한편,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법리는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사안의 경우, ㉠ 甲이 소장에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지만 이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700만 원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700만 원에 관하여만 발생한다. ㉡ 다만, 나머지 1천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이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된 2022. 5. 1.로부터 6월 내인 2022. 6. 1.에 나머지 1천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함으로써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乙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IV. 설문 4.에 대하여

1. 결 론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700만 원 전부를 인용할 수 있다.

2. 이 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의 방법)

-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제203조).
- ②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¹⁾
- ③ 사안의 경우, ㉠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인데, 甲은 그중 우선 700만 원을 일부 청구하였고, 甲의 과실비율은 20%로 인정되었으므로, 우선 전체 손해액 2천만 원에서 20%의 과실상계를 하면 그 잔액은 1천600만 원이 된다. ㉡ 그런데 위 잔액이 甲의 청구금액 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법원은 그 중 적은 쪽인 甲의 청구금액 700만 원 전부를 인용할 수 있다.

V. 실문 5.에 대하여

1. 결 론

甲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2. 이 유(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²⁾

- ①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② 그러나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도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③ 사안의 경우, ㉠ 甲은 乙을 상대로 묵시적 일부청구로써 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1) 대판 2008. 12. 24. 2008다51649.

2) 대판 1997. 10. 24. 96다12276.

였고,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채권 전부가 소송물이 되고 그 전부에 관하여 기판력도 발생한다. 따라서 甲의 잔부청구를 위한 별도의 소제기는 중복소송에 해당하거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자라 하더라도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甲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